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양순임 의원 외 15명(의안번호 76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건물이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추가(안 제4조)
-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 삭제(안 제7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검증된 인증체계를 갖춘 외부기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시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을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임.
- 상위법인 「장애인등편의법」¹⁾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가 높지만, 이외 민간 건축물의 경우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1)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축물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할’시,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 지원을 통해 인증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8조의2 신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²⁾의 대상시설 중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³⁾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인증을 취득할 시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인증 수수료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1,000㎡ (제2구간)	1,000㎡~3,000㎡ (제3구간)	3,000㎡~10,000㎡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장애인	기존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장애인	기존 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안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후단 개정은

무장애 시설인증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와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⁴⁾에 따르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상근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무장애 시설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그 외 개정은 안 제8조의2에 인증취득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4조제7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인증제도 홍보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7조의 무장애 시설인증 관련 조문 삭제에 따라 안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6호의 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조례 운영상 중복되고 불필요한 제15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및 제17조(사상)의 조문을 삭제한 것임.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8. 3., 2021. 12. 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취득할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양순임 의원 외 15명(의안번호 77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성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능기부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범위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능기부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능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주 안에 있지만, 전문봉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폭넓은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재능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봉사자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성 있음.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기본이념 및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정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 여건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성북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제시

○ ‘재능기부’는 크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으며,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10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1. 10. 기준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현황

(2022. 11. 10 현재)

■ 서울시 : 총 10개 자치단체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등 (미제정 : 15개구)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1. 10. 경수현 의원 외 8명(의안번호 78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우선적 적용을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조)
-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8조)
-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함(안 제9~10조)
-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노인학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지원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대 사례의 경우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20년 6,259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증가하였음.

<전국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사례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학대사례	4,622	5,188	5,243	6,259	6,774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참조)

- 1) 일반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
- 2)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

- 전국적으로 학대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431건, 서울특별시 736건, 경상북도 599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북구의 경우 20건(0.3%)으로 집계되었음.

<2021년 서울시 노인학대 사례 건수 및 비율>

행정구역	건수	비율(%)	행정구역	건수	비율(%)
서울시 전체	736	10.8			
종로구	14	0.2	서대문구	25	0.4
중구	8	0.1	마포구	36	0.5
용산구	27	0.4	양천구	25	0.4
성동구	17	0.3	강서구	62	0.9
관악구	52	0.8	구로구	45	0.7
광진구	17	0.3	금천구	22	0.3
동대문구	35	0.5	영등포구	29	0.4
중랑구	31	0.5	동작구	32	0.5
성북구	20	0.3	서초구	10	0.1
강북구	36	0.5	강남구	18	0.3
도봉구	31	0.5	송파구	38	0.6
노원구	48	0.7	강동구	21	0.3
은평구	36	0.5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참조)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노인보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노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 학대 증가 추이에 비추어볼 때,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제시

-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 판단할 수 있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22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1. 10. 기준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 현황

(2022. 11. 10 현재)

■ 서울시 : 총 23개 자치단체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광진구, 강서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미제정 : 3개구)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6. 7., 2015. 1. 28.>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13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4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09. 29. ~ 2022. 10. 19.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5)됨에 따라
- 현행 조례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5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 제8조제5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06. ~ 2022. 10.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각 동의 협의체에 두는 자문위원의 수를 기존 ‘5명 이하’에서 ‘필요한 경우’로 자문위원의 수의 상한선을 폐지한 것으로, 이는 동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동협의체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⁶⁾에서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6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2021년 9월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
-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와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 2023년 조성 예정인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의 관리와 운영 등 성북마을관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제10조(계약체결 등) 제2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성북마을관리사무소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정릉동)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36㎡) 모든 시설물과 장비

○ 위탁기간 : 2023.01.01. ~ 2025.12.31.(3년)

○ 위탁사무 : 성북마을관리소 관리·운영

-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희망아지트) 관리·운영

○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

- 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 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마을관리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성북마을관리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선정심의위원회 부적격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성북마을관리소’는 어르신 낙상예방과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9월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
- 민간위탁하려는 ‘성북마을관리소’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
 3.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4.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5.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희망아지트)관리·운영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

시설명	소재지 (면적)	개소일	위탁체 (재계약)	위탁기간	운영 인력	소요예산
성북마을 관리소	정릉로38라길 32 (26.21㎡)	2021.9.15	주식회사 에이징인플 레이스	2023.1.1.~ 2025.12.31.	3명	인건비 : 125,978천원 운영비 : 17,400천원 사업비 : 68,200천원 합 계 : 211,578천원

<마을관리소 운영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서비스’ 추진 실적>

○ 서비스 항목

①주거서비스					②공구대여		③집수리 주민교육	
신청가구	완료	진행중	지원품목	시공건수	대여횟수	대여품목	상반기	하반기
192가구	156가구	36가구	31종	272건	67회	157개	10명	50명

○ 서비스 지원가구 현황(가구수)

장애가 구	가구형태			정부지원			주택형태				
	독거	부부	기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일반저소득	대규모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38	157	17	18	142	12	38	94	16	36	41	5

다. 민간위탁(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⁷⁾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적정하다고 사료됨.
- 또한 성북마을관리소 관리 운영사무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등 종합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써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계약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69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인 「성북시니어클럽」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 시 설 명 : 성북시니어클럽 및 외부 사업장 4개소
 - 위 치 : 성북구 안암로 79 (안암동 5가 104-148) 등

- 시설내용

구분	시설명	위치 및 면적	시설 용도	비고
1	성북시니어클럽	안암로 79, 1층 (66.12㎡)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2	시니어 동행 다듬이	월곡1동 경로당 2층 (오패산로3길 99, 99㎡)	쇼핑백 제조	외부 사업장
3	9988 공동 작업장1	월곡 갑을명가 215호 (화랑로11길 26, 65㎡)	쇼핑백 제조, 포장	
4	9988 공동 작업장2	석관1동 경로당 지하층 (한천로74길 1, 64㎡)	쇼핑백 제조, 포장	
5	장위 사업장	장위 어르신 행복지원센터 1층 (한천로 708, 235㎡)	일상생활지원센터 요리·자연노리 체험교실 커피정원 등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지역 어르신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어르신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년 5월 31일 ‘성북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평가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 시니어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임.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 시니어클럽 현황〉

시 설 명 (운 영 체)	주 소	연면적	위탁운영 기간	운영예산	종사자
성북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계영 복지재단)	안암로79 (안암동5가)	66.12㎡	2018.3.1~ 2023.2.28. 5년	- 361,458천원 (시비60 :구비40%)	- 관장: 1인 - 정규직: 5인 - 전담인력 8인(계약직)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조8)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제5조제1항⁹⁾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8)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③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¹⁰⁾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북시니어클럽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7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이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이용의 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삭제(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06. ~ 2022. 10.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제한(안 제9조제1호) 조문 중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11)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8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3년 5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동아라운 (천금순)	장월로1길 28 (월곡2동)	개인 (천금순)	28/26	2018.06.01. ~ 2023.05.31.
2	엔젤 (박미자)	보국문로 116 (정릉4동)	개인 (박미자)	24/24	
3	통통 (김미라)	화랑로48길 16 (석관동)	개인 (김미라)	35/34	
4	파아란 (손은미)	솔샘로24길 15 (정릉4동)	개인 (손은미)	49/41	

- 위탁기간 : 2023.06.01. ~ 2028.05.31.(5년)
-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3.02.예정)

○ **위탁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내용

- 동아라온 외 3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성북구는 총 88개소가 운영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행정동	평가인 증	비고
1	동아라운	129m ²	28명 (26명)	11명	개인(천금순)	월곡2동	A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 (10년)
2	엔젤	102m ²	24명 (24명)	10명	개인(박미자)	정릉4동		
3	통통	167m ²	35명 (34명)	9명	개인(김미라)	석관동		
4	파아란	183m ²	49명 (41명)	11명	개인(손은미)	정릉4동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¹²⁾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¹³⁾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¹⁴⁾ 및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제1항¹⁵⁾에서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4)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49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 위탁기간 : 2023.01.01. ~ 2027.12.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함.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2022. 12. 예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은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이하 “키움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키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2023.01.01. ~ 2027.12.31.) 재계약하려는 것임.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⁶⁾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성북구는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위탁대상 현황과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1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키움센터 성북1호점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 설 명 (운 영 체)	주 소	대 표 (시설장)	정원	현원	위탁운영 기간	운영예산	비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호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 연구원)	돌곶이로 37길 324 (장위1동)	정성현 (손민경)	29	29	2021.1.1~ 2022.12.31	12,348천원(월) (국·시·구)	- 시설장: 1인 - 종사자: 3인 - 월기본운영비: 1,550천원(국·시·구) - 월인건비: 약 10,798천원(국·시·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키움센터’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17)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고,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18)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키움센터’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8) 「아동복지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성북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현황

□ 시설현황

(2022. 11월 현재)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소	면적 (㎡)	정원 /현원	위탁단체	위탁기간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돌곶이로37길 32-4	94	29/29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2021.01.01. ~2022.12.31
2호점	선종복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16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2020.12.01 ~ 2025.11.30
3호점	장현옥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4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021.09.01 ~ 2026.08.31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2021.03.01. ~2026.02.28
5호점	김정윤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23	사단법인 희망동지 나웃	2021.09.01 ~ 2026.08.31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사단법인 해피피플	2021.10.01 ~ 2026.02.28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10.01 ~ 2025.05.31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송인로 50,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32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03.01. ~ 2025.8.31
9호점	김한울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115	23/27	사단법인 해피피플	2021.03.01 ~ 2025.06.30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25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2021.09.01 ~ 2026.08.31
11호점	조혜은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1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2.07.01 ~ 2027.06.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0호)
- 나. 회부일자: 2022.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맞벌이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구립 돌봄센터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아래 센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모	정원	위탁운영법인	現)운영기간
구립길음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서경로6길 70 (길음동)	447㎡	49명	정인교회	2018.3.1.~ 2023.2.28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¹⁹⁾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3년 2월 28일자로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운영체)	주소	대표 (시설장)	정원	현원	위탁운영 기간	운영예산	비고
구립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정인교회에서 무상임대)	서경로6길 70 (길음동)	이철웅 (곽수정)	49	35	2018.3.1~ 2023.2.28	8,984천원(월) (국시구)	- 시설장: 1인 - 종사자: 2인 - 월기본운영비: 8,180천원(국시비) - 토요운영비: 304천원(국시) - 구비운영비: 500천원(구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²⁰⁾에서 구청장은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1조의²¹⁾에서는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 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 추진은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적정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21)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한 것으로 판단됨.

성북구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현황

□ 시설현황

(2022. 11월 현재)

연번	시 설 명	시 설 장 (종사자수)	행정동	소 재 지	위 탁 체	공간확보	정원	현원	위탁기간 (신고일)
1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곽수정 (3)	길음1동	서경로6길 70 (정인교회)	정인교회	무상임대	49	34	2018.3.1.~ 2023.2.28. (2012.2.8.)
2	석관동 꿈나무키우미	전해숙 (4)	석관동	한천로79길14-14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무상임대 (성북구)	35	35	2020.9.1.~ 2025.8.31. (2012.8.2.)
3	종암동 꿈나무키우미	장지안(3)	종암동	종암로19길 18 (종암중앙교회)	종암중앙교회	무상임대	49	44	2022.2.1.~ 2027.1.31. (2014.3.31)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1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 등의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지자체가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명시(안 제6조2)
-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근거 명시(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06. ~ 2022. 10.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재정지원)제3항 신설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음.

<개정 전·후 비교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u>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6.2.3]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전문개정 2016.2.3]

- 안 제6조의2(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와 안 제12조(지도·감독)의 신설은 안 제4조에서 체육회 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한 체육회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2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 (별표1 개정)
- 사용신청 주민 우선 조항 추가 : (제3조 4항)
- 명칭 변경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내용개정
 - “성북구 생활체육회” ⇒ “성북구체육회” (2021.6.2.법인설립등기)
-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 추가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1항 5호 개정
 - “국가유공자(배우자포함)” ⇒ “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으로 개정
 - 별표3을 추가 (별표3 제정)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을 정비
- 기한지난 조항 삭제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③항 폐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10% 감면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이용료 반환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도록 개정 : 제10조, 11조
-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공개하는 조항 추가 : 제13조 3항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시행령 부칙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관계법령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06. ~ 2022. 10. 2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 주민 우선 조항과 공공질서 위반 등의 행위로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추가한 것임.

-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와 제10조제2항제1호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어 (2021. 6. 2. 법인설립 등기) 그 명칭이 “성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성북구 체육회”로 변경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3급이상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한 것이며,
- 안 별표 3은 국가유공자 등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감면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에 적법 타당함.
- 안 제10조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사용확산을 위한 감면 규정의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며,
- 안 제11조제1호는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을 취소 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공체육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이고,
- 안 별표1 개정은 정릉족구장, 물빛수영장, 종암박스파크 등 체육시설 5개소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중 기존에 명시하지 않은 8개 보훈 관련 법령 대상자를 감면 규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3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3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 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 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문화 행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출연근거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²²⁾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²³⁾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출연규모

- 2023년도 출연금은 정규직 총 인건비, 신규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3.9%인 6억 3,022만원이 증액된 166억 7,746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출연금 추이 및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규모	46,126,477	16,047,245	16,677,468
전년대비 증감액	3,204,585	-79,232	630,223
전년대비 증감률	24.7%	-0.49%	3.9 %

〈전년도대비 문화재단 출연금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A)			
성북문화재단 운영	15,797,365	16,047,245	16,677,468	630,223	1. 정규직 총인건비 증액 작년 28%→3.8% 적용 2.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성과급 등 인건비성경비·기본경비 증액 3. 사업비, 자본적지출 증액 - 신규 위탁시설(김중업건축문화의집, 숲속 도서관)운영비, 기존 시설 운영비 등 - 영화수입 증가에 따른 영화사분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 온라인채용시스템 - 노후시설 개선 - 윤중식 작품 수중 운영, 미술관연구소 TF 용역 등 -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라.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14. 성북구청장(의안번호 54호)

나. 회부일자: 2022.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개정 2014. 5. 28.)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
 - 운영비 분담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²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한다)는 2015. 12. 15.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2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근거

-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음.

<p>「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p> <p>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p>

다. 출연금 현황 및 추이

- 2023년도 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가 등으로 2,054만원이 증가된 2억 9,594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출연금 추이 및 운영비는 다음과 같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규모	265,850	275,400	295,940
전년대비 증감액	101,000	9,550	20,540
전년대비 증감률	61.3%	3.6%	7.5%

<전년도대비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B)	증감 (B-A)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A)			
서울시청자미디어 센터 운영	271,000	275,400	295,940	20,540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

라.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방송법」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